

삼척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5년 10월 9일

산업·건설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9월 27일 삼척시장 제출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9월 27일

다. 심사일자 : 제8회 삼척시의회 (임시회)

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('95.10.9)에서 심사·의결

II. 제안설명의요지(제안설명자: 환경보호과장 박진하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지난 90년도 이후 5년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 등결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요금을 년차적으로 현실화하고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함.

- 시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의 사업규모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함.
-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을 상향조정함.

다.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 : 별첨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호현)

- 과거 삼척시장 고시로 정하였던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관계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신설하였으며,
- 90년도 이후 5년간 동결되었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중 분뇨수거료는 37.6%, 정화조 청소요금을 30.3% 인상하므로써, 주민부담이 우려되나, 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인상조치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.
- 그러나, 주민부담 최소화와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수료 일괄 인상조치보다는 연차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오·벽지지역에 대한 분뇨운반 과정에서 운반료 부담을 우려하여 분뇨 미수거시에는 관련 분뇨업체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90년도 부터 5년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?	○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타시 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결하였음.
○ 분뇨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운송료 부담을 고려해서 하류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?	○ 분뇨처리장은 혐오시설로서 이전시에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.
○ 타 시·군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 인상 사례는 ?	○ 강원도내는 전시군 공히 5년간 동결후에 30~40% 인상 추진중임.
○ 오물 수거료 요금체계를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가 요망됨.	○ 조례가 개정되면 대행업체에서 요금표를 지참하여 수거토록하고 미터기등을 재점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